

광주, 공기산업·송정역사 증축...전남, SOC·미래산업 집중

내년 국비 어선사업에 얼마나 확보했나
친환경차부품 클러스터 140억원
광주형일자리 주거비 미반영 옥외티
경전선 전철화 사업 297억원
국립심혈관센터 부지매입 44억원

광주시가 국비 2조원 시대를 연 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3조원 시대에 근접했다. 정부 정책기조를 미리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한 전략 덕분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한국판 뉴딜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활동을 통해 국회의심 의 단계에서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국비 활동 과정에서 낙후한 전남의 기반시설(SOC)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점찍어온 바이오·생명과학·드론·e-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공을 쏟았다.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미반영은 '옥외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주요 사업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20억원) ▲광주송정역사 증축비(20억원) ▲가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29억원) ▲마이크로로봇 실용화 기술개발(104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140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84억원)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30억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비(6.1억원) ▲정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삼부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45억원) ▲광주하남-장성상계 광역도로 확장(20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50억원) 등이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근로자 주거

비 지원 사업비(20억원)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옥외티'로 남는다. 광주시는 관련 지원법이 없는 탓에 우회전략으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전문인력양성 실습장비 구축비' 10억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는 대신 주거·의료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광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던 1600억원 규모의 자기 응용과학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과 RE100 구현 에너지AI 통합관제 구축사업비 등이 미반영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전남, SOC 사업·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국비 확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전남도는 오랜 숙원인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1조7000억원)의 내년도 사업비 297억원을 확보했다. 정부 편성 예산안보다 110억원을 추가확보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부산 구간 소요시간은 4시간(6시간 33분→2시간 20분) 단축된다. 무안공항을 거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광주-목포 구간·총사업비 2조4000억원) 사업비 4240억원(공단 부담금 포함)도 확보했다. 정부는 2025년 개통 계획이나 전남도는 이보다 2년 앞당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 구축(총사업비 200억원) 사업 설계비 등 10억원 등 51개 사업 157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전사대교 보행로 달아주기(총사업비 300억원) 사업비 4억원, 오시안노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총사업비 293억원) 사업 설계비로 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총사업비 467억원) 사업은 설계 및 공사비로 20억원이 확정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총사업비 490억원)를 위한 설계·부지매입비 44억원이 반영됐다. 화순백신산업



2021년 국비 신규 사업비에 지역 숙원사업인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사 증축사업(총 예산 500억원)을 위한 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됐다. 사진은 광주 송정역 제1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주차된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특구 바이오·의료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320억원) 사업비도 10억원 확보했다.

정부 편성안에 빠졌던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사업비 20억원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 광양항 육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광양세종산단 1단계 부지 일부(33만㎡)를 매입해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산단과 달리 입주 조건이 완화되면서 물류·제조기업 입주를 가속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힘 안전조정위 신청 '발목' 아특별 개정안 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못해

간사협의 16~17일 재논의키로

문화전당 국가기관 지위 상실 위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심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3일 안전조정위 카드를 꺼내드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연내에 '아시아문화전당도 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안전조정위를 주장하는 등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아특별법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고, 오는 16~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를 안전조정위를 통해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간사 협의를 통해 안전조정위 대신 16~17일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엇보다도 아특별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부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당 이병훈(동남)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대표 발의했다. '6월 법안'은 문화전당로부터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의 위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8월 법안'에는 문화전당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8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위탁 유효기간만 5년 연장한 뒤, 그 이후에 국가조직화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조칙과 예산 투입이 규정된 8월 법안 대신, 유효기간 연장만을 보장하는 6월 법안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8월 법안 통과를 위해 자신이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6월 법안을 자신 철회하는 배수진을 쳤지만, 8월 법안의 통과를 현재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 추락...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 조사...진보·중도 등둘러
호남서 13.9%P 큰 폭 하락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1위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나란히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 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전 최

저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당시인 작년 10월의 41.4%보다도 4%포인트나 낮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p), 중도층(5.5%p)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떨어졌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4.9%p), 광주·전라(13.9%p), 부산·울산·경남(10.4%p)이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지난 8월 2주 이후 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각각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르고, 5.2%포인트가 떨어진 결과다. 특히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를 기록한 것 모두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진보층

의 지지율이 57.2%에서 47.3%로 9.9%포인트 급락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2.7%포인트 내렸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번 조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와 그에 따른 검찰의 반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 위 결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추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진보성향 단계까지 나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진보 진영 내 분화가 생겼는지 지지율 이탈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 정당은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6.0%, 정의당 5.5%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우체국 예금 전남지방우정청

내 자산 안전하게 지켜주고
광주·전남 어디에나 있고 모두에게 꼭 맞는
예금 상품이 있으니까

가치 잇기

괜찮아
우체국 예금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착한 우체국 예금**입니다

내 자산 안전하게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우체국 택배는 안전합니다

방문택배 문앞에 있습니다.

더 편하게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집콕 택배 신청

- 비대면 신청방법
 - 모바일, PC • 전화 1588-1300
- 비대면 접수 및 요금 할인(500원/통당)
 -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사전결제하고, 픽업장소 지정하면 500원 할인 혜택 제공
- 서비스 지역 확대 (단, 도서산간 등 일부지역 제외)

우체국보험 전남지방우정청

국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
광주·전남우체국에서 FC(보험설계사)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지원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